

유관기관칼럼

製品安全을 위한 提言



신 종 현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부회장
02-890-8300

분명의 발전과 더불어 그 발전의 맥을 같이한 전기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다.

이것은 인간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기본적인 욕구에서부터 시작되어 급속한 다기능적 요소들이 우리의 삶속에서 동행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전기제품 기능이 다양화되고 이에 비례해서 제품의 안전과 내구성 문제, 전자파 방해, 환경 문제 등은 오히려 그 부담이 가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근대에는 감성공학의 적용과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위한 디자인 (design)도 크게 발전되고 있다.

기업들은 다양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경쟁적으로 하나의 제품에 기술을 융합시키는 컨버전스(Convergence)제품 또는 필요한 기능만 부각한 디비전스(Divisions) 제품군 등의 신제품을 출시하는 등 공격 경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쟁 구조하에서 오히려 제품의 기본요소인 안전(安全)을 도외시하는 문제점이 간과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정부의 제품안전정책은 국민의 소비생활과 밀접한 제품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품안전은 전기, 가스, 소방 및 교통안전 등과 함께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규제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발전의 장애요소로 인식하게 된다.

소비자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문제와 함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균형 잡힌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두마리 토끼를 잡기” 노력은 2005년 10월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를 설립하면서 시작되었다.

제품안전과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소득수준 향상과 더불어 전기제품은 국민의 소비생활과 밀접한 관계이나 이에 비례하여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하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장의 해외이전이 수년전부터 붓물을 이루고 인터넷의 등장으로 유통경로가 다양해지고 있어 최근 동남아 저질 공산품이 시중에 대량 유통되면서 안전사고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협회는 이러한 불법·불량 전기용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전기제품 업계의 발전

과 국민소비생활 안전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5년 10월부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정부로부터 불법전기제품에 대한 단속업무를 위탁받아 소비자 안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안전관리자가 없는 중소기업을 위해 전기용품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고, 기업 대표를 대상으로 CEO안전관리혁신포럼을 개최하는 등 전기제품생산업체의 안전의식 고취와 전문가 양성에 힘쓰고 있다.

기업중심의 경영체제 확립

WTO/TBT(무역기술장벽)에서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 환경, 보건, 위생 분야 등에 대한 기술규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기술수준, 환경조건 등을 고려한 규정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유럽 등 선진국도 자국의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안전관련 장치를 마련하고, 철저한 시장 감시를 통해 자국민의 소비생활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면서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선진국의 높은 기술규정은 후진국 입장에서는 수출 장벽으로 작용되고 있고, 우리의 제품안전 정책도 세계적 여건 변화와 사회적·경제적 환경에 맞추어 대응하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흐름에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의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여건으로서는 대응 준비가 그리 밝아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시키기 위해 협회에서는 우리 업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첫째, 회원지원사업 강화

협회의 설립목적은 회원사들이 안정적으로 기업을 경영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으므로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을 매일 업계에 Mailing 시스템으로 진파하여 정부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있고, 지역별 순회 간담회를 실시하여 업계의 애로사항을 발굴, 해소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제품안전에 대한 기술개발을 높일 수 있도록 금년에 처음으로 정부로부터 30억원의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R&D 사업자금을 위탁받아 우리나라 공산품의 안전도를 크게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금년도 치유 시행되는 이번 R&D 사업으로 향후 제품안전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수도권에서 공장부지 협소로 애로를 겪고 있는 업체들을 위해 충청권에 협동화단지를 빠른 시일내에 조성하여 국비를 보조(부지매입자금의 70%)받아 저렴한 비용으로 중소기업들에게 분양하여 입주시킬 계획이다.

둘째, 불법·불량제품 단속기능 강화

협회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불법제품 조사 업무'를 탄바꿈시키기 위하여 지금까지 민원에 의한 조사에 치중하므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많았으나, 조사업무를 보다 능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안전성이 취약한 제품군과 지역에 대하여 대대적이고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해 불법제품의 근원을 뿌리 뽑는데 역량을 집중하여, 기업과 소비자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안전관리 파수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자 한다.

셋째, 제품안전관리 교육 강화

소비자의 안전 확보는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관계자들의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제품안전취약 분야 종사자에 대한 내실있는 교육을 강화하고, 행정처분 등 법령위반 업체에 대해 제품안전교육을 의무화 하여 안전의식을

제고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한 사후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자치단체 공무원에게도 안전전문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위해 요소 사전 예방에 노력해나갈 방침이다.

넷째, 품목별협의회 활성화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선진화 시키기 위하여 현재 10개의 품목별 협의회를 3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품목별 협의회에서 안전인증 기술기준의 사전 검토와 진의를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인증 운영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동종업계별 정례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애로사항 및 발전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한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여 국내 전기제품산업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다.

이러한 품목별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유통조사 사업에 참여시키는 등 정부와 유관기관의 관심과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제품안전 중심기관화

또한, 협회는 그동안 전기제품에 국한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 영역을 전기용품 뿐만 아니라 모든 공신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담당토록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협회가 제품안전에 대한 '통합적 중추기관'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제도화 하기 위해 근거법령의 제정 등을 위해 정부(기술표준원)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 있다.

맺는 말

최근 지속적으로 전기밥솥·온열기·휴대폰 배터리 폭발사고 등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제반 경제지표상으로는 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도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후진적인 안전사고는 국민을 우울하게 한다.

그러나 우리는 경제성장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쉼 없이 달려왔고, 그 결과 세계 초유의 경제성장을 단기간에 이룩한 것과 같이, 제품안전에 대한 질적고도화도 우리 국민들의 의지만 모여진다면 단기간에 이룩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양적으로 만이 아니라 질적으로 진정한 '신진국'으로 향해 나가야 할 때이다.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는 그 기반을 닦는 초석이 될 것이다.

'안전관리 총괄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제품 개발에 총력을 경주하고, '제품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불법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다.

| 기술표준 2009.3